

드라마 <보이스4>로 알아보는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의 위법성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였는데, 건물의 관리자가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입과정에서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및 그 취지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원심은 구법 조항에 따라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드라마 속 한 장면

드라마 <보이스4>는 범죄 현장의 골든 타임을 사수하는 112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적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1회에서는 송승헌(데릭조 역, 형사)이 마약 카르텔의 2인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송승헌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에 많은 물품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하여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2013. 12. 22.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건물의 관리자가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입과정에서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법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1.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 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불합치, 2015헌바, 2018. 4. 26.)

이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

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 3.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1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장한다.

원심 판결

원고는 “경찰이 수색영장없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원심은 구법 조항에 따라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259445 판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는 범위’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중략)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참조).



원심 판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및 그 취지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던 이상, 위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신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보이스4>를 통하여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하여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